



충남 내포신도시

양승조 충남지사 “내포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0개 유치” “혁신도시 최적의 장소…지방세 감면·정주여건 개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조성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3월 9일 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충남 혁신도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는 이해 충돌 없는 최적의 장소로, 새롭게 혁신도시 부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개 가운데 해양·에너지·농업 등 도정 방향과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유치해야

한다”며 “20개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다”고 덧붙혔다.

충남도는 내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5년간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종사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도는 균특법 개정안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오는 7~8월께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공공기관 유치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유치 작업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과 연계돼 있어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곳으로 이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청사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